

신정부 출범 이후 헝가리의 경제정책 변화 전망과 시사점

이철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박도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원 (dhpark@kiep.go.kr, Tel: 044-414-1225)



차 례

1. 헝가리 총선 결과와 배경
2.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변화 전망
3.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 [총선 결과와 배경] 2026년 4월 12일 헝가리 총선 결과, 야당 티서(Tisza)당의 압승으로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오르반 정권의 16년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 민주주의 후퇴, EU에 반하는 외교정책, 경기 침체 등이 정권 교체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 [주요 정책 변화 전망] 지난 5월 9일 출범한 헝가리 신정부는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친EU 성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환경,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후퇴한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사법 독립성을 회복하고 EU 회원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및 경제정책 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대 초반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 헝가리의 경제 현안을 고려하여 신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최근 2년간 성장이 정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건전화 정책 수립이며, 이를 위해 동결된 EU 기금 해제가 가장 시급함.
 - 헝가리의 재정 상황은 V4 국가 중 가장 취약하며,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Junk,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고 마자르 신임 총리는 2030년대 초반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신정부는 국채금리 상승과 차입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재정 긴축과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오르반 정부의 동방정책에 의한 아시아 자본 편중 및 저임금 조립 제조업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개편하여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 진출한 국가가 헝가리인바, 이러한 헝가리 신정부의 정책 변화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헝가리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지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대한 선제적 준법성 점검,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강화, 신정부와의 신속한 소통 채널 구축, 공급망 다변화 및 친EU 파트너로서 중국기업과의 차별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헝가리 총선 결과와 배경

■ [총선 결과] 2026년 4월 12일 헝가리 총선 결과, 야당 티서(Tisza)당의 압승으로 헝가리에서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총선 결과, 티서당은 53.2%(약 338만 표) 득표로 의석 199석 중 141석을 확보하면서 1990년 민주화 이후 헝가리 단일 정당이 자유선거에서 획득한 최대 의석수를 기록함.
 - 4월 총선의 투표율 또한 약 79%로 민주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티서당은 단독으로 개헌선(133석)을 초과하는 141석을 확보하여 광범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함.
 - 기존 집권당 피데스(Fidesz)는 38.6%(약 246만 표) 득표에 그쳐 의석 수가 직전 135석에서 52석으로 급감하였으며, 극우 정당 우리조국운동(MH)이 5.6%(약 36만 표) 득표로 6석을 확보함.¹⁾
- 4기 연속 16년간 집권했던 오르반 정부가 퇴장하며 장기 집권이 종식됨.
 - 오르반(Viktor Orbán) 전 총리의 피데스당은 2010~26년 4기 연속 집권하며 EU 내 대표적 비자유주의 정권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기록함.
- 지난 4월 15일 티서당 대표 마자르 페테르(Magyar Péter)가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고, 5월 9일 신정부가 공식 출범함.
 - 5월 9일 신정부 출범 당일, 의회 건물에 EU 깃발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게양되었으며, 이는 마자르 신정부의 친 EU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마자르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국가 재건과 반부패 개혁 추진을 표방했으며, 5월 중 각 부처 장관 임명 및 내각 구성을 완료할 예정임.
- 티서당은 2020년 창당된 군소 정당이었으나, 2024년 마자르 총리가 합류한 이후 같은 해 6월 EU 의회 선거에서 약 30%를 득표(7석 확보)하며 급부상하였음.²⁾

■ [배경] 오르반 정권의 16년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 민주주의 후퇴, EU에 반하는 외교정책, 경기 침체 등이 정권 교체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오르반 정권은 16년 집권 기간 동안 사법부, 중앙은행, 언론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켰으며, 2012년 신헌법 제정 이후 15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의 권한을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킴.
 - EU 부정행위방지국(OLAF)이 적발한 EU 기금 관련 고위급 부패 사건이 다수 있으나, 헝가리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방치해왔음.
 - 헝가리 국립은행(MNB) 산하 재단의 약 2,700억 포린트 규모의 공공자금 유용 사건, 4iG의 국방산업 자산 무경쟁 인수 등 대규모 부패 사례가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 202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헝가리는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EU 회원국

1) Nemzeti Választási Iroda(NVI),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vtr.valasztas.hu/ogy2026>(검색일: 2026. 5. 20.).

2) 마자르 총리는 과거 피데스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으나, 2024년 초 오르반 정권의 부패 및 아동학대 사건 은폐를 폭로하며 정치에 입문함.

- 중 불가리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55점)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유럽의회는 헝가리를 “선거형 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y)” 체제로 규정하였으며, 사법 독립, 언론 및 학문의 자유 수준 등이 EU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음.
 - 이로 인해 EU 집행위는 2022년 12월 헝가리에 대해 조건부 규정(Regulation 2020/2092)을 발동하여 EU 기금 동결을 단행함.
 - 선거 환경 역시 게리맨더링, 관영매체 독점, 딥페이크 유포, 국가 자원의 선거 자금화 등 집권당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본 선거에서는 대중의 누적된 불만이 이를 압도함.
- 또한 오르반 정권은 EU와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및 대러 제재안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EU 통합에 부담을 가중시킴.
- 2026년 초 러시아의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 공격 사태³⁾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억 유로의 차관 및 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일시 중단시켰음.
 - CATL, BYD 등 중국발 대규모 EV·배터리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환경, 노동 기준 완화와 정부 보조금 특혜 논란이 제기되며 유권자의 반감이 확산됨.
 -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에너지·투자 의존도가 중부유럽국 대비 현저히 높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단기간 내 탈러시아, 탈중국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헝가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가계 실질구매력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2026년 4월 총선에서 피데스 지지층 이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헝가리의 성장률은 2023~25년 3년 연속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중부유럽 4개국(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대비 성장세가 현저히 부진함.
 - 인플레이션은 2022~23년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란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됨.

■ [경제 현황 및 현안] 마저르 신정부는 16년 만의 정권 교체와 동시에, 누적된 경제 정체, 재정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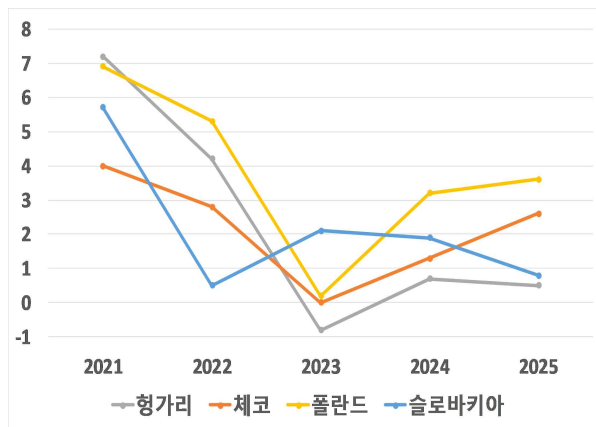
- [저성장 기조 지속] 헝가리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7.2% 정점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2023년 -0.8%로 중부유럽 4개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3~25년간 3년 연속 정체 상태에 직면함(그림 1).
 - 2025년 기준 헝가리의 성장률(0.5%)은 중부유럽 최저 수준으로, 폴란드(3.6%), 체코(2.6%)뿐 아니라 EU(1.5%) 성장률에도 크게 하회함.
 - 동 기간 주요 중부유럽 국가는 코로나 19 충격 이후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한 것과 달리, 헝가리는 회복이 지연되며 상대적 부진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임.
 - EU 집행위는 2026년 헝가리의 성장률을 약 2%로 전망하며, 민간소비와 투자 회복, EU 기금 유입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함.
 - 다만 헝가리의 2014~19년 평균 GDP 성장률(4.2%)에 비하면 중기 잠재성장률이 크게 후퇴한 상태

3)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 원유를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중동부 유럽에 공급하는 핵심 송유관으로, 2026년 1월 27일 해당 송유관 구간에 대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헝가리향 원유 공급이 중단된 바 있음.

로, 산업 기반의 저부가가치 조립 중심 구조와 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제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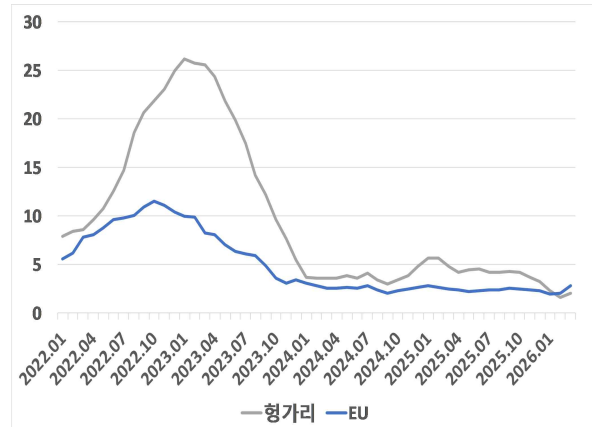
- [고물가 충격과 인플레이션 재반등 압력] 헝가리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23년 1월 26.2%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 시점 EU 소비자물가 상승률(10.0%)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임(그림 2).
 - 이후 2024년 1월 3.7%까지 안정화되며 EU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2025년 1월 5.7%로 재반등하여 중부유럽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부각됨.
 - 이후 헝가리 정부의 가격 통제 및 기저효과로 인해 2026년 2월 1.6%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란전쟁발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3월 2.1%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헝가리 중앙은행(MNB)의 목표치(2~4%) 하단에서 재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있음.
 - MNB 정책금리(6.25%)는 EU 회원국 중 루마니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 사이에서 운용 여력이 제한된 상황임.

그림 1. 중부유럽 4개국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



자료: Eurostat, GDP and main aggregates -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annual data(naida_10_gdp)(검색일: 2026. 5.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2. 헝가리, EU 소비자물가지수(CPI)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Eurostat, HICP - monthly data (annual rate of change (1997-2025)(prc_hicp_manr);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HICP) - ECOICOP ver.2 - indices and rates of change, monthly data(prc_hicp_minr) (검색일: 2026. 5.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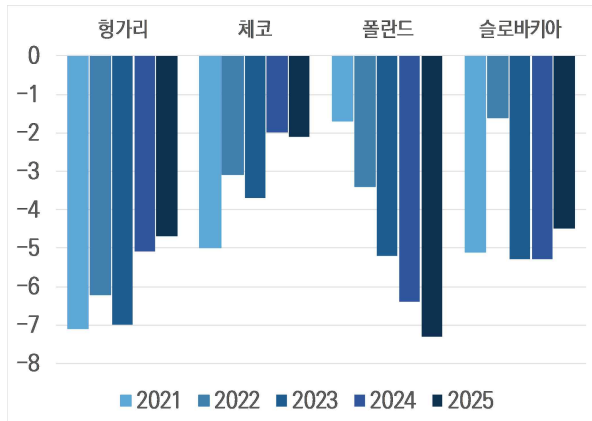
- [만성적 재정 적자와 중부유럽 최고 수준의 정부부채 부담] 헝가리의 재정수지는 2021~25년 5년 연속 EU 안정·성장협약(SGP) 기준선인 -3.0%를 큰 폭으로 초과한 -4.7~-7.1%를 기록하며 만성적 재정 적자 악화가 고착화됨(그림 3).
 - 2021~23년 3개년 모두 헝가리가 중부유럽 4개국 중 최대 적자국이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도 -4.7%로 EU 평균(-3.1%), 체코(-2.1%), 슬로바키아(-4.5%)를 상회함.
 - 2026년 재정수지는 선거 직전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 2025년 -4.7%에서 -5.2~-6.5%로 확대 전망 됨.4)

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autumn-2025_en(검색일: 2026. 5. 20.); Oxford Economics, "Hungary: Opposition win to help the economy return to sustained growth," <https://my.oxfordeconomics.com/reportaction/d744ac3-2525-4d02-bfd7/Toc?SearchTerms=hungary>(검색일: 2026. 5. 20.); EIU, "One-click Report Hungary," <https://viewpoint.eiu.com/analysis/geography/XG/HU/reports/one-click-report>(검색일: 2026. 5. 20.).

- 정부부채는 2025년 GDP 대비 약 75%로, EU 평균(82%)보다는 낮으나, 중부유럽 4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그림 4), EU의 과도재정적자절차(EDP) 적용 대상임.

그림 3. 중부유럽 4개국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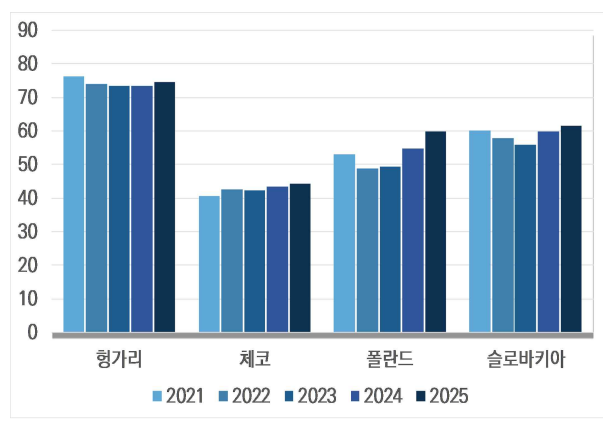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Government deficit/surplus, debt and associated data(gov_10dd_edpt1)(검색일: 2026. 5.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4. 중부유럽 4개국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Government deficit/surplus, debt and associated data(gov_10dd_edpt1)(검색일: 2026. 5.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3대 신용평가사 동시 부정적 전망] 3대 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는 헝가리를 투자등급 하단(BBB-/Baa2/BBB)으로 평가했으며, 3사 모두 헝가리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함(표 1).
 - 이는 향후 신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과 EU와의 관계 개선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차환 비용이 가중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함.

표 1. 중부유럽 4개국 신용등급

구분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S&P	신용등급	BBB-/A-3	AA-/A-1+	A-/A-2	A
	전망	부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평가일	25.04.	25.03.	25.12.	26.04.
Moody's	신용등급	Baa2	Aa3	A2	A3
	전망	부정적	안정적	부정적	안정적
	평가일	24.12.	25.07.	26.03.	24.12.
Fitch	신용등급	BBB	AA-	A-	A-
	전망	부정적	안정적	부정적	안정적
	평가일	25.12.	26.02.	26.02.	25.12.

자료: Oxford Analytica, Eastern Europe's V4 risks further fiscal deterioration(검색일: 2026. 5.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이러한 누적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마자르 신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성장·재정·금융 전반에 걸친 안정화 과제에 직면함.
 - [저성장 탈피] 중부유럽 최하위로 고착화된 성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회복과 EU 기금 유입을 통한 동력 확보가 시급함.

- [재정 정상화] 향후 5년 동안 중부유럽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 구조와 EU 과도재정적자절차(EDP) 대응을 위한 중기 재정 조정 경로 제시가 필요함.
- [외환 및 금리 안정] 4월 선거 직후 포린트가 강제로 전환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30bp 급락(7.5% → 6.2%)하였으나,⁵⁾ 재정정책 신뢰 회복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함.
- [신용도 회복] 신용평가사 3사 동시 부정적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와 더불어 동결된 약 170억 유로의 EU 기금의 해제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2.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변화 전망

- [신정부의 정책 변화 전망] 지난 5월 9일 출범한 헝가리 신정부는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친EU 성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⁶⁾
 - 후퇴한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사법 독립성을 회복하고 EU 회원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및 경제정책 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대 초반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⁷⁾
 - 전술한 헝가리의 경제 현안을 고려하여 신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는 최근 2년간 성장이 정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건전화 정책 수립이며, 이를 위해 동결된 EU 기금 해제가 가장 시급함.⁸⁾
 - 헝가리의 재정 상황은 중부유럽 4개국 중 가장 취약하며, 국가 신용등급은 '정크(Junk,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는바, 신정부는 국채금리 상승과 차입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재정 긴축과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마자르 신임 총리는 2030년대 초반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재정적자 GDP 대비 3% 미만, 정부부채 GDP 대비 60% 미만, 안정적인 물가 및 환율 유지 등 '마스트리히트 수렴 조건' 충족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함.
 - 또한 신정부는 오르반 정부의 동방정책에 의한 아시아 자본 편중 및 저임금 조립 제조업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개편하여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⁹⁾
 - 따라서 신정부는 향후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서방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신정부는 러시아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차원의 기후 및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¹⁰⁾

5) Oxford Economics, "Hungary: Opposition win to help the economy return to sustained growth," <https://my.oxfordeconomics.com/reportaction/d744ac3-2525-4d02-bfd7/Toc?SearchTerms=hungary>(검색일: 2026. 5. 20.).

6) Oxford Analytica(2026. 4. 23.), "Hungary will see far-reaching changes under Magyar."

7) Oxford Analytica(2026. 5. 7.), "Eastern Europe's V4 risks further fiscal deterioration."

8) *Ibid.*

9) Oxford Analytica(2026. 4. 3.), "Eastern European FDI trends will diverge."

- 신정부는 EU 차원의 환경 정책을 ‘규제’가 아닌 EU 기금 활용의 ‘기회’로 인식하고 EU의 ‘REPowerEU’ 계획과 발맞추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또한 오르반 정권 당시 퇴출되었던 EU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Erasmus 등)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임.

■ [EU 기금 동결 현안] 전 오르반 정권의 반EU 성향과 법치·민주주의 후퇴를 사유로 2026년 4월 기준 헝가리에 배정된 EU 기금 약 323억 유로 중 약 170억 유로(결속정책 기금 76억 유로, 코로나 회복·복원력 기금(RRF) 95억 유로)가 동결된 상태임.

- EU 집행위는 조건부 규정(Regulation 2020/2092), 공동조항규정(CPR)의 수평적 활성화 조건, RRF 27개 슈퍼마일스톤, EDP 등 4중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헝가리 기금을 다층적으로 동결함.
 - 주요 동결 사유는 사법부 독립성 미흡, 반부패 체계 부재, EU 재정 이익 보호 미흡, 공공조달 투명성 부족 등 법치주의 결함임.
- [결속기금] 2026년 4월 기준 결속기금 배정액 약 220억 유로 중 약 76억 유로가 동결된 상황임.
 - 결속기금은 EU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7개년(2021~27년) 예산 패키지로, 4개 펀드(ERDF, ESF+, CF, JTF)와 기타 보조 펀드로 구성됨(표 2, 표 4).
 - 헝가리는 2022년 12월 22일 EU 집행위로부터 약 220억 유로의 결속기금을 배정받았으며, 배정과 동시에 해당 결속기금은 전액 동결되었음.
 - 2022년 12월 약 220억 유로 전액 동결 후, 2023년 12월 약 102억 유로,¹¹⁾ 2024년 3월 약 20억 유로가 부분 해제되었으며,¹²⁾ 2년 미접근 자동 만료 조항으로 인해 2024년 12월 약 10억 유로가 영구 상실되어, 2026년 4월 기준 잔여 동결액은 약 76억 유로임(표 2, 표 4).

10) *Ibid.*

1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considers that Hungary's judicial reform addressed deficiencies in judicial independence, but maintains measures on budget conditionality" https://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news/commission-considers-hungarys-judicial-reform-addressed-deficiencies-judicial-independence-maintains-2023-12-13_en(검색일: 2026. 5. 20.); 2023년 12월 헝가리의 사법 독립이 일부 인정되어 약 102억 유로가 환급 청구 가능.

12) Bloomberg, "EU Unblocks About €2 Billion From Suspended Funding for Hungar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3-01/eu-unblocks-about-2-billion-from-suspended-funding-for-hungary>(검색일: 2026. 5. 20.); 2024년 3월 공교육 및 양성평등 활성화 조건이 추가 충족되어 약 20억 유로가 추가 환급 청구됨.

표 2. 헝가리 결속정책 기금별 배정액(2021~27년)

기금명	기금 성격 및 역할	헝가리 배정액	비중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EU 지역 간 격차 시정	약 130억 유로	약 61.7%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	노동시장 접근성 확대, 교육 및 사회통합	약 53억 유로	약 25.0%
결속기금(CF)	1인당 GNI<EU 평균 90%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적 결속 강화	약 26억 유로	약 12.3%
공정전환기금(JTF)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석탄 및 갈탄의 단계적 폐지 지역 경제 다각화 지원	약 2억 유로	약 1.0%
합계		약 210억 유로	100%

주: 1) EU 집행위 Cohesion Open Data Platform의 2026년 1월 1일 기준 EU 분담분(EU Share) 수치이며, 이는 2024년 말 약 10억 유로 영구 손실분이 반영된 실효 배정액임. 채택 시점(2022. 12. 22.) 배정액은 약 220억 유로.
2) 본 표는 결속정책 4대 펀드만을 포함하며, 결속정책과 별개로 운영되는 망명·이주·통합기금(AMF) 등은 제외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hesion Open Data Platform, "Hungary - 2021-2027 Cohesion Policy"(2026. 5. 8. 일일 업데이트, EU share 기준)(검색일: 2026. 5. 20.).

- [회복·복원력 기금(RRF)] 2026년 4월 기준 헝가리 RRF 배정액 약 104억 유로 중 약 95억 유로가 동결됨.
 - RRF는 Next Generation EU(NGEU)의 핵심 기금으로, Regulation(EU) 2021/241에 근거하여 EU가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에 코로나 회복 자금을 지원하는 일회성 기금임.
 - 헝가리 RRF 배정액 104억 유로는 보조금 65억 유로, 대출 39억 유로로 구성되며, 27개 슈퍼마일스톤 미이행으로 전액 동결되어 있음(표 3, 표 4).
 - * REPowerEU 규정의 자동 사전지급(automatic pre-financing) 의무에 따라 보조금 1.4억 유로(2024. 1. 15.)와 대출 7.8억 유로(2023. 12. 28.)가 슈퍼마일스톤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헝가리 RRF 잔여 동결분은 현재 약 95억 유로임(표3, 표4).
 - 헝가리는 EU 회원국 중 RRF 인출을 시작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며, RRF 사용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
 - * RRF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모든 마일스톤 이행 완료가 요구되며, 9월 말까지 지급 청구 제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집행위 최종 지급 완료 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미사용분 영구 상실 시한이 임박한 상황임.¹³⁾

13) Budapest Business Journal, "Hungary Will Have to Fulfill 'Super Milestones' to Access RRF Funds," <https://bbj.hu/politics/foreign-affairs/eu/hungary-will-have-to-fulfill-super-milestones-to-access-rrf-funds/>(검색일: 2026. 5. 20.).

표 3. 헝가리 RRF 배정액 및 동결 현황(2026년 4월 기준)

구분	금액	비고
RRF 보조금	약 65억 유로	2022년 12월 16일 이사회 시행 결정으로 보조금 약 58억 유로가 최초 승인됨. 이후 2023년 12월 NRRP 개정으로 REPowerEU 보조금 약 7억 유로가 추가되어 총배정액 65억 유로로 구성됨.
RRF 대출	약 39억 유로	2023년 12월 REPowerEU 챗터에서 RRF 대출 39억 유로가 추가 배정됨.
RRF 총 배정액	약 104억 유로	-
사전 지급 기수령	약 9.2억 유로	REPowerEU 사전 지급 의무로 27개 슈퍼마일스톤 조항과 무관하게 지급(보조금 1.4억 유로, 대출 7.8억 유로 지급).
잔여 동결분	약 95억 유로	2026년 8월 31일까지 27개 슈퍼마일스톤 이행 시 지급 가능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1.1 5.), "hungary's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disburses final tranche of REPowerEU pre-financing payment to Hungary under 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검색일: 2026. 5. 20.).

표 4. 헝가리 동결 EU 기금 요약(2026년 4월 기준)

구분	헝가리 총배정액	잔여 동결액	비고
결속정책 기금(ERDF, ESF+, CF, JTF)	약 220억 유로	약 76억 유로(배정액의 약 35%)	CPR 수평적 활성화 조건, 조건부 규정 동시 적용
RRF(보조금 65억 유로, 대출 39억 유로)	약 104억 유로	약 95억 유로(사전 지급 약 9억 유로 제외 시)	27개 슈퍼마일스톤 미이행으로 전액 동결, 2026년 8월 31일 시한
합계	약 323억 유로	약 170억 유로	-

자료: 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EU) 2022/2506 of 15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ion budget against breaches of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n Hungary(2022. 12. 20.);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amending the Implementing Decision of 15 December 2022 on the approval of the assessment of the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for Hungary"(2023. 12. 8.);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ungary's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검색일: 2026. 5. 20.).

■ [신정부의 EU 기금 동결 해제 추진] 마자르 총리는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EU 집행위와 협상에 돌입하여 향후 기금 동결 해제 전망을 밝게 하였으나, EU 집행위는 기금 동결 해제의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

- 2026년 4월 17~18일 EU 집행위 사절단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차기 정부와 비공식 협의를 개최함.¹⁴⁾
 - 핵심 의제는 RRF 마일스톤 이행 가속화, 헝가리 국가회복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1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tement on technical meetings with the incoming Hungarian Governmen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6_844(검색일: 2026. 5. 20.).

Plan)의 전면 재설계, 결속기금 동결분 해제였으며,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동결기금 해제 협상에서 분리하기로 양측이 합의함.

- 2026년 4월 29일 마자르 차기 총리는 브뤼셀을 방문하여 폰테어라이엔 위원장, 코스타 의장과 회담을 가짐.¹⁵⁾
- * 마자르 측은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헝가리 총리로서 5월 25일 주에 브뤼셀에서 EU와 정치적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 발표함.
- * 또한 유럽검찰청(EPP) 가입 등 집행위 요구를 상회하는 조치, 사법 독립 보완 입법 신속 처리, 공공조달 및 반부패 입법 패키지 재정비를 협상 카드로 제시함.
- * 다만 EU 자금 수령을 위해 법적 개혁을 동반하되 헝가리 국익을 희생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 한편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헝가리에 배정된 동결 EU기금 해제를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논의했으며, EU 집행위는 헝가리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럽의 공동 가치들과 재정렬(realign)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 언급함.
- *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이 아닌 “재정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존 일탈의 시정이 자금 동결 해제의 전제임을 명확히 함.
- EU 집행위는 RRF 중 보조금 65억 유로 부분만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39억 유로 규모의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헝가리 측의 자발적 포기를 제안하였음.¹⁶⁾
- * 거부 사유: ① 2026년 8월 31일 RRF 기금 프로그램 종료까지 개혁 이행 시간 부족, ② 헝가리의 이미 높은 공공부채(GDP 대비 75% 수준)를 신규 대출이 더욱 가중시킬 우려
- 이러한 EU 집행위의 RRF 대출 부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마자르의 “EU와의 리셋(reset)” 공약에 미달하는 결과로 인식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임.

■ [RRF 동결 해제 추진 우선 정책] 마자르 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 시한이 임박한 RRF 자금의 동결 해제이며, 이를 위해 RRF 지급 조건인 27개 슈퍼마일스톤 중 미충족·부분 충족 항목과 EU 기본권 헌장 관련 영역의 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헝가리 시민사회 4개 단체의 공동 평가에 따르면, 헝가리는 RRF 27개 슈퍼마일스톤 중 완전 충족 17개, 부분 충족 9개, 미충족 1개로 평가됨.¹⁷⁾
 - 또한 동 보고서는 EU 기본권 헌장 4개 영역(사법 독립, 학문의 자유, 망명권, LGBTQI+ 권리)의 이행 현황도 평가하였으며, 사법 독립을 제외한 3개 영역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 해당 시민사회 분석에 따라 마자르 총리가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개혁 사안들은 다음과 같음.
 - [반부패 통제 실질화] 헝가리 청렴청(Integrity Authority)과 반부패 태스크포스(ACTF)의 독립성 및 수사 권한을 실질화하고, 유럽검찰청(EPP)에 가입하여 EU 기금 관련 부패 사건을 EU 차원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15) Ursula von der Leyen 공식 X 계정 (@vonderleyen), <https://x.com/vonderleyen>(검색일: 2026. 5. 20.).

16) News Front, “The European Commission is not prepared to unfreeze Hungary’s frozen funds, despite the change of government,” <https://en.news-front.su/2026/05/07/the-european-commission-is-not-prepared-to-unfreeze-hungarys-frozen-funds-despite-the-change-of-government/>(검색일: 2026. 5. 20.).

17) Amnesty International Hungary, Hungarian Helsinki Committee, K-Monitor,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Hungary(2025), “Assessment of Hungary’s Compliance with Conditions to Access European Union Funds,” https://helsinki.hu/en/wp-content/uploads/sites/2/2025/12/HU_EU_funds_assessment_2025.pdf(검색일: 2026. 5. 20.).

- * EPPO 기입은 마자르 총리가 4월 29일 폰테어라이엔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핵심 협상 카드로, 향후 6~8월 입법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사법 독립 회복] 헝가리 대법원 판결 절차에서 EU법 우선원칙 침해 소지를 제거하는 추가 입법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 [공공조달 공정성·경쟁성 제고] 신정부는 공공조달 시 단일입찰 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다수 사업자 참여 의무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 제고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NRRP 재설계] 오르반 정부가 마련한 기존 NRRP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신 본래의 그린·디지털 전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NRRP가 재설계될 것으로 예상됨.
- [대학 거버넌스 개혁] 헝가리 국공립 대학 21개교의 운영권을 지닌 공익신탁재단(Public Interest Asset Management Foundation)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분리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산하 21개 대학의 EU 직접관리 펀드 접근권 회복이 추진될 전망이다.
- [LGBTQI+ 차별 시정] Act LXXIX of 2021¹⁸⁾의 폐지 또는 EU 기본권 헌장과의 정합화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적 합의 형성 부담으로 정치적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 마자르 신정부는 5월 말 브뤼셀에서 EU와 정치적 합의 체결, 6~7월 개혁 입법 패키지 처리, 8월 RRF 마일스톤 이행 완료, 9월 RRF 지급청구 제출의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EU 집행위는 조건의 본질적 완화는 없으며 동결 해제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한 내 RRF 보조금 65억 유로의 완전 수령 여부는 향후 3개월간의 개혁 이행 속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3.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최근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 진출한 국가가 헝가리인바, 이러한 헝가리 신정부의 정책 변화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기업의 헝가리 진출은 SK온, 삼성SDI, 셀트리온 등을 필두로 한 ‘이차전지 및 바이오’ 중심의 첨단·친환경 공급망 투자가 주를 이루며 막대한 대유럽 수출 성과를 내고 있으나, 현지에서 중국기업의 대규모 진출에 따른 경쟁 격화와 심각한 구인난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¹⁹⁾
 -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패턴이 친환경·첨단산업 공급망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헝가리는 SK이노베이션(SK온), 삼성SDI 및 관련 협력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이차전지(배터리) 부문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되었음.
 - 의약품 기업인 셀트리온은 2010년 헝가리에 유럽 거점 현지 판매법인(Celltrion Healthcare Hungary)을 설립하여 유럽 시장 직접 판매를 확대해왔으며, 헝가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한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투자는 한국 본사로부터의 중간재, 부분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수출을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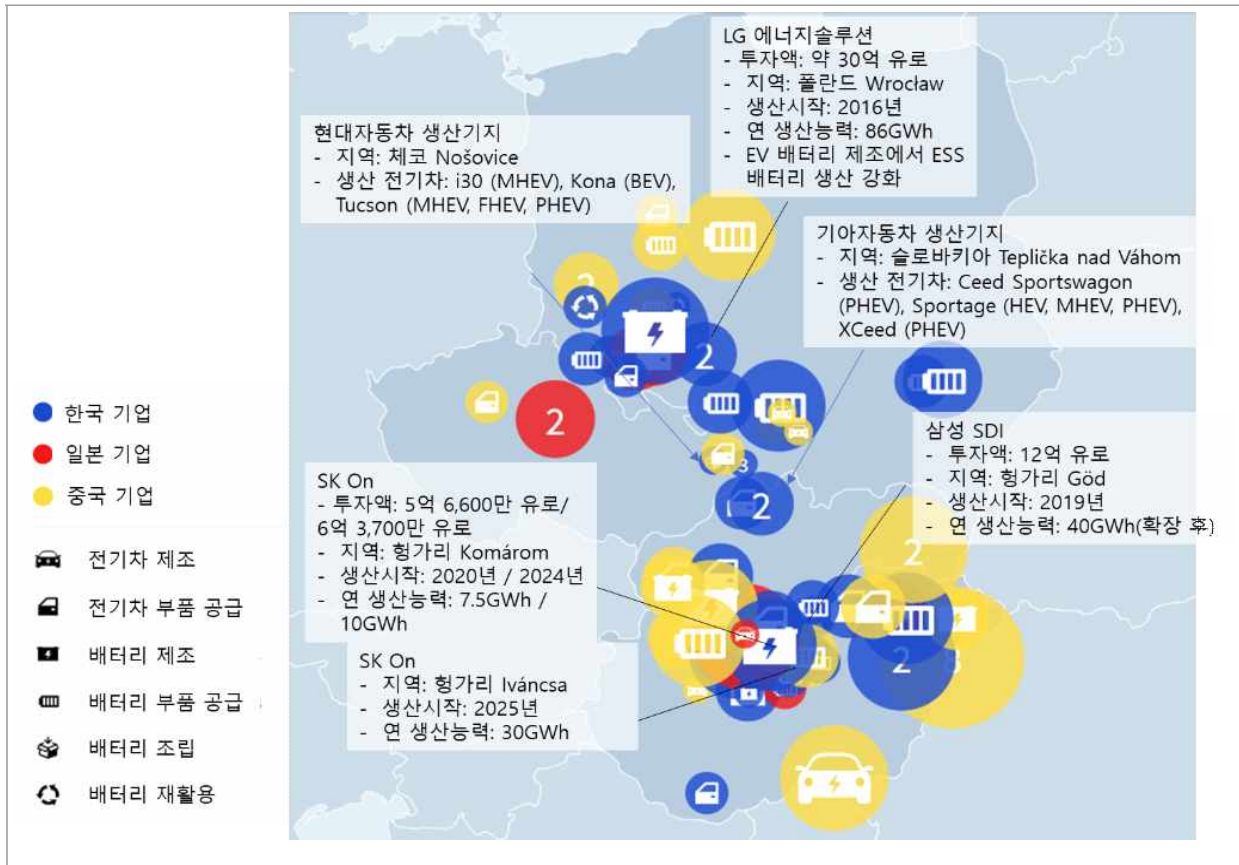
18) Act LXXIX of 2021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성전환 등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 접근을 금지·제한하는 법안으로, EU 기본권 헌장의 차별 금지·표현의 자유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EU 집행위가 2022년 7월 CJEU에 제소한 상태임.

19) 이철원, 나수엽, 임유진(2026),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자료 25-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 결과 2024년 기준 헝가리는 EU 회원국 중 한국이 둘째로 큰 무역수지 흑자(44,466백만 달러)를 기록한 국가임.

- 최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앞세워 헝가리에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를 감행함에 따라 기 진출한 한국기업과의 현지 인력 확보 및 경영 환경 전반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한국 배터리 기업의 중부유럽 진출 현황



자료: CEIAS, "Central Europe-East Asia EV Nexus Tracker," <https://evnextracker.ceias.eu/map/>(검색일: 2025. 12. 1.); 이철원, 나수엽, 임유진(2026), p. 36에서 재인용.

- 헝가리의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규제 강화, 보조금 축소 등 불확실성에 노출됐지만, 장기적으로 헝가리의 친EU 복귀에 따른 경제 안정화와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라는 기회 요인을 얻을 수 있음.²⁰⁾
 - 신정부는 총선 과정에서 기존 오르반 정부 시기 이루어진 배터리 산업 투자 관련 인허가 과정의 부패 여부 조사 및 재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기 진출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환경 기준(용수 사용, 폐기물 처리, 탄소 배출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 증설과 투자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0) 부다페스트 현지 출장(2025. 6. 19.~24.),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 A 면담자료; 이철원, 나수엽, 임유진(2026), pp. 90~103에서 재인용.

- 오르반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수억 유로 규모의 파격적인 현금성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정권은 이러한 특혜성 지원에 비판적인바, 향후 추가 투자 시 정부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세제 혜택 조건이 엄격해질 수 있음.
- 헝가리와 EU 당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 헝가리 내 거시경제 안정성이 높아지고 유로화 도입 추진 등 금융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 유럽 시장 전체를 목표로 하는 한국기업에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신정부 출범은 오르반 전 총리의 전격적인 지원으로 최근까지 헝가리 진출에 공격적이었던 중국기업에 대한 견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현지화 과정을 상당 부분 마친 한국기업들은 신정부의 까다로워진 규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바, 유럽 시장 내에서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다시 확고히 다지는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²¹⁾

■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 헝가리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지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대한 선제적 준법성 점검,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강화, 신정부와의 신속한 소통 채널 구축, 공급망 다변화 및 친EU 파트너로서 중국기업과의 차별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의 환경 감사 및 인허가 재검토 공약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환경 오염 방지 설비를 재점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법적·환경적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경영 리포트를 공개하여 신정부의 ‘반부패·법치주의’ 기조에 부합하는 모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와 신속한 소통 채널을 구축함은 물론 그동안 대규모 배터리 공장 유치 과정에서 환경 오염 우려를 표명했던 헝가리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장학 사업, 친환경 인프라 구축, 현지인 고용 환경 개선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야 함.
 - 한국기업의 투자가 헝가리 고용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국익 파트너’임을 새 정부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EU 차원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불투명한 보조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중국기업과의 차별화에 적극 나서야 함.
 - 한국 배터리가 ‘배터리 여권제(Battery Passport)’, ‘공급망 실사법’ 등 EU의 친환경 규제를 완벽히 충족하는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친EU형 파트너’임을 신정부와 현지 유럽 완성차 업체(OEM)에 강조함.
 - 헝가리의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서 중국 대기업과의 구인 경쟁이 치열한바, 한국기업들은 현지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고용 환경을 보장하고, 신정부가 중요시하는 ‘노동자 인권 및 투명성 요건’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최고급 현지 엔지니어들을 흡수해야 함.²²⁾ KIEP

21) CW(2026. 5. 6), "Why Hungary's China Bet on Batteries Faces Voter Backlash," <https://english.cw.com.tw/article/article.action?id=4756>(검색일: 2026. 5. 28.).

22) 더구루(2026. 4. 15), 「헝가리 새정부, 외국인 투자·생산원가 압박 예고...전기차 배터리 생산 허브 강점 잃나」, <https://v.daum.net/v/Kiemy1gRWX?f=p>(검색일: 2026. 5. 28.).